

광주시, 직원들이 법리 개발 승소... 20억 절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직접 변론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행정소송에서 이겨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유사 사건 해결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A주택개발법사업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종 승소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대규모 수도공사 및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 표준조례와 달리 급수구역 내·외 구분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A개발조합에 부과하자, A조합 측이 "광주시 조

1심서 패하자 전담팀 구성해 직접 변론전략 수립... 벼랑끝 역전극 행정신뢰·재정안정 두마리 토끼 잡아... 전국 갈등 해결 모범 사례

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2023년 1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광주시의 일부 과다 부과를 인정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후 같은 쟁점의 추가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자칫 패소하면 광주시는 약 20억원의 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될 상황이였다.

광주시는 포기하지 않고 '원스톱 대응 전략'을 택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법무·재정 인력을 묶은 7인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소송 대응, 제도 개선,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했다.

직원들이 직접 5대 광역시 급수역간 통계와 관련 판례·입법례를 토대로 '광역시

급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율권'을 증명하는 법리를 구축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다. 또 모든 증빙자료를 전자자료(DB)로 묶어 반복 민원 및 행정심판에 신속히 대응했다.

이 같은 원스톱 적극 대응으로 2024년 9월 2심 재판부는 "광주시 징수조례가 수도법 취지에 부합하고 과다 부과라 볼 근거가 없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광주시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쟁점의 소송 3건을 잇달아 이겨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주시는 이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4건, 제조금액 16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 상수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절감된 예산을 노후 상수관 교체 등 안정적 수도물 공급에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판결 확정과 함께 관련 조례·고시 개정안 마련에 착수,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김일용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승소는 직원들이 직접 법리를 개발해 행정의 신뢰와 재정 안정을 동시에 지켜 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축적된 판례와 대응 모델을 환경부 및 타 지자체와 공유, 전국적으로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광주시, 시민 마음건강 안전망 강화

심리지원·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와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전화는 일상 속 고민부터 극단적인 위기상황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 지난해 1만5000건, 올해 상반기 70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포털 '마음뽀짝+'(www.bbojjakplus.kr)을 통해 우울 및 스트레스 자기관리, 온라인 심리지원, 정서지원 키트,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플랫폼 '마들렌'(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에서는 자가진단,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예약, 정신건강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캠페인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 시민실천단 운영, 16만여 명의 '빛고을 수호전사' 생명지킴이 양성 등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 경찰청, 자살예방센터가 협

업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으며, 정신응급 의료기관을 8곳까지 확대해 응급입원 불발률을 2023년 32%에서 2025년 상반기 12%까지 낮췄다.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며, 8월부터는 응급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즉각 연계 시스템을 3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6월 시범 운영된 자살유족 대상 '멘탈히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은 향후 사별기간에 따른 맞춤형으로 확대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 취약 문제도 집중 대응한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명지킴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심리 위기에 처한 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 등 5개 자치구 21개 동의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위한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 ▲자살다빈도 장소 야간 로고젝터 설치 ▲'생명지킴이'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예방활동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은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위기 대응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광주·전남 지역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서구아너스, 천원국시, 이웃돌봄단 등 '착한도시 브랜드'를 통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섰다.

서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는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관내 13세대에 생활필품과 전기발열, 냉장고, 선풍기 등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서구는 집중호우로 건물이 침수된

광주 서구, '착한도시 브랜드'로 수해복구 힘 보태

서구아너스, 천원국시, 이웃돌봄단 등 인적·물적 자원 가동

유덕동과 서창동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천원국시 매장 이용 쿠폰과 밀키트 1000인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폭우로 임시대피소에 머물렀던 이재민들에게도 천원국시 밀키트 40인분을 지원했다.

서구는 피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을 위

해 인적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동네 이웃돌봄단과 노인맞춤돌봄 생활관리사 370명이 5000여 명의 독거노인과 고독사위험군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을 실시해 피해주민 16명을 발굴해 조치하는 등 촘촘한 보호망을 가동하고 있다.

박석우 기자

서구 전역 119개소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장들도 자체 점검을 통해 침수 점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서구청과 연계해 즉각적인 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에 맞서 서구만의 인적 자산을 총동원해 빠른 회복과 촘촘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생활정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북구, '폭우 피해 극복' 위한 '민·관 협업체계' 가동

고향사랑기부 긴급 모금 시작... 5억 원 모금 목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복구에는 하루 동안 426.4mm의 비가 쏟아져 곳곳에서 주택 침수, 도로파손, 차량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하천 범람의 위험으로 주민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북구는 폭우로 생활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복구 전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긴급 모금'과 '긴급의연금품 자율 모금 캠페인'에 나선다.

먼저 '고향사랑기부 긴급 모금'은 피해 현장을 복구하는 데 자치구가 가진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고향사랑기부 공공·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북구는 모금 개시에 앞서 기금심의위

원회 심의 및 의회 보고 등 모금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은 고향사랑기부 공공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 웰로 등 총 3개 모금처에서 가능하며 복구의 목표 모금액은 5억 원이다. 이번 모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폭우 피해 현장 복구 과정 전반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북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진행되는 '긴급 의연금품 자율 모금 캠페인'을 8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피해 주민에게 전달될 의연금품 모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접수 물품은 ▲식료품 ▲생활용품 ▲침구류 ▲소형 가전제품 등이며 복구정책과를 통해 접수된 후 피해 주민에게 전달되며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2일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8월 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37.73㎢로, 남구 전체 면적 60.96㎢의 61.9% 수준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효덕동과 송암동 일부 및 대

남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내달 1일까지 무단 건축물·형질 변경 등 조사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촌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남구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 방점을 두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토지 형질 변경

과 무단 건축, 불법 적치 등 허가 없이 진행된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자진 철거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과도하게 훼손한 행위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올해 상반기 중 2차례 단속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행위 등 7건을 적발해 2건은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5건은 시정명령 중에 있다. /임채일 기자

23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 가맹점 모집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naver.me/GT604sQe)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는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제공하고, 지역화폐

사용 고객 유치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동구랑페이는 지역사회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다"면서 "많은 동구 내 사업장들이 가맹점으로 참여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동구랑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구 지역화폐로, 1인 한도 50만 원까지 광주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15% 파격적인 특별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철수 기자

☎062-525-9775

